



미국의
이란 전쟁
2~8면

알렉스 캘리니코프 논평
트럼프는 이란 공격에서
꼬리를 내릴까? 3면

임금 인상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
9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투쟁
9면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10면

외국인 '불법' 라이더
집중 단속 실시
11면



이재명 정부는 파병 아예 생각도 말라

관련 기사 4면



이란 공격에 맞선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이 2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그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3월 7일 영국 런던에서는 전쟁저지연합(StW)과 반핵군축운동(CND)이 소집한 집회에 약 3만 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이란 폭격 중단하라,” “트럼프의 전쟁을 멈추자,” “대이란 전쟁 반대” 등의 팻말을 들었다. 팔레스타인 깃발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영국의 혁명적 신문 <소셜리스트 워크>는 이란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나선 여러 이란인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조명했다.

그중의 한 명인 다리우스 씨는 “여성, 생명, 자유”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것은 2022년 이란에서 도덕 경찰에 의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항쟁의 구호이기도 하다. 다리우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제 가족은 이란에 있습니다. 저는 이란 민중을 지지합니다. 그들이 억압적 정권하에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폭격



3월 7일 런던에서 열린 이란 전쟁 반대 시위

을 당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제국주의는 이란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석유와 가스를 약탈하려 합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날 50여 도시에서 전쟁 반대 연대체인 ANSWER가 수백 명 규모의 시위들을 열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이해 3,000명이 거리를 행진하며 이란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3월 5일 목요일

선원노조연맹이 24시간 파업을 벌여 선박 운행을 멈췄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선원들을 즉각 복귀시키라고 요구하는 파업이었다.

노동조합들은 그리스 선박주들이 정부와의 공조하에 페르시아만으로 배를 보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을 위협에 빠뜨릴 뿐 아니라 전쟁을 키우는 행위라고 노동조합들은 비판하고 있다.

그리스의 혁명가들은 이러한 선원들의 투쟁을 전쟁에 맞선 파업으로 키

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는 약 100명이 모여서 이란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바레인에서는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얼마 뒤인 3월 1일 전국 곳곳에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경찰이 이를 강경하게 진압했다고 <미들리스트 아이>가 보도했다.

바레인 시위대의 분노는 대체로 미국을 향했다고 한다. 바레인에는 미국 제5함대의 본부가 있고 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군 병력이 주둔해 있다.

바레인에서 마지막으로 전국적 대중 시위가 벌어진 것은 2011년 아랍 혁명의 물결 속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바레인의 항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낸 군대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됐다. 이는 아랍 혁명을 짓밟은 반혁명 과정의 서막을 연 사건이었다.

바레인에서 다시금 떠오른 저항의 불씨는 미국 제국주의를 돕는 중동 다른 나라들에도 잠복해 있다. 그것이 각국 정권들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항쟁으로 다시금 물결치기를 바란다.

이원웅

레바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레바논 정부의 저항 탄압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갓산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지금 레바논 정부가 사실상 “저항을 일절 금지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외중에 테러 국가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 점령을 확대할 기회로 삼으려 죽고 파괴를 퍼붓고 있다.

3월 2일 월요일 이스라엘은 강도 높은 폭격을 시작했고 이후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해 120명을 죽였다(3월 6일 현재).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번 공격의 목표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을 확대·장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갓산은 이

번 공격은 “분명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의 명백한 승인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것은 점령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정착지들은 레바논 남부의 땅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에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해 11월 이래로 휴전 상태이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을 400번도 넘게 위반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파괴는 엄청났습니다. 소위 휴전 기간에도 공격은 일방적으로 계속됐습니다. 헤즈볼라는 10개월 동안 공격을 삼갔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집을 잃었습니다. 농업·농장·임야 관련 피해가 막심합니다.”

갓산은 이스라엘이 “고의적·체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나무를 뽑고, 농지를 파괴하고, 목자들을 표적 공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물에 화학 약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괴 행위로 현재까지 레바논인 약 8만 4,000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 갓산은 “피란민 구호를 위해 많은 단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 사람들이 주로 집중하는 일은 피란민 구호입니다. 정부가 그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갓산은 그 단체들이 정치적 문제도 제기하며 레바논 정부에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에 당선한 레바논 대통령 조

제프 아운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려 해 왔다. 3월 2일 월요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자 아운은 헤즈볼라의 군사 행동을 금지했다.

아운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나 평화를 결정할 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레바논 국가에만 있다.”

갓산은 레바논 정부가 “저항을 일절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이 조처는 테러방지법과 연결돼, 저항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개인들을 범 죄시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적입니다. 저항은 그런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운은 이스라엘에 맞서 레바논인들을 보호할 태세가 전혀

▶ 3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는 이란 공격에서 꼬리를 내릴까?

“혁명을 침공하지 마라.” 1980년 가을 <타임스>가 내린 경고다.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부추김을 받아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한 경고였다.

사실 그때는 이미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이 1979년 팔레비 독재를 타도한 노동자 주도 민중 혁명을 패배시킨 뒤였다.

그러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란 국가는 혁명의 기수를 자처했다. 8년에 걸친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덕에 이란 정권은 이란 민족주의를 토대로 권력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혁명과 전쟁이라는 건국 과정의 경험을 보면, 지금의 공격과 알리 하메네이(호메이니의 후계자)의 죽음에도 왜 이슬람공화국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역사가 모흐센 밀라니가 지적하듯이 이란 정권은 “1인 독주 체제가 아니다. 그 정권의 권력은 제도화돼 있고 여러 개의 중심과 다층적인 보안·정보 기구를 갖추고 있다.” 이란 정권은 “애초부터 외부 공격을 견뎌 내도록 설계돼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기구는 십중팔구 이슬람혁명수비대일 것이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신임 최고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스타바의 선출은 트럼프를 능멸하는 처사였는데, 그동안 트럼프는 자기가 새 이란 통치자를 고를 것이라고 떠들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자행한 해적질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한 듯하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납치되자 고분고분한 텔



미국은 굴욕을 피하려고 전쟁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시 로드리게스가 권한 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국가정보위원회 기밀 보고서는 미국이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단단하게 고착된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군사·성직자 권력층을 제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란이 트럼프 정부의 예상보다 전쟁에 더 잘 대비돼 있었다”고 인정하는 “복수의 미군 관리들”을 인용했다.

현재까지 이란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견뎌 내며 중동 전역에 꾸준히 미사일과 드론을 날릴 수 있었다.

과소평가

미국이 과소평가한 것은 이란의 질감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계획은 이란이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 지역의 하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이것은 단지 걸프 연안국들이 유럽과 아시아 모두의 핵심 석유·천연

가스 공급자라는 사실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두바이는 인구 400만의 세계적 도시로 급성장했다.

그 이유는 — 세계화 예찬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 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바이는 걸프·유럽·동아시아 같은 부의 중심지와 인접한 덕에 금융, 항공, 관광, 명품 소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생존이 달린 싸움에서 이란 정권이 그 지역의 경제를 교란시키려 할 것이라는 점은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걸프 연안국들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다.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의 약 20퍼센트, 해상 운송 석유의 약 25퍼센트가 그곳을 지난다.

투자은행 JP 모건의 나타샤 카네바는 이렇게 지적했다. “역사를 통틀어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단지 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로 활동했다

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상상조차 못할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역사상 최대의 석유 공급 파동”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기드온 레크먼이 ‘엑스’(옛 트위터)에 이렇게 쓴 것도 놀랍지 않다. “이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이고 하메네이가문의 또 다른 일원이 이란을 통치한다. ‘거대한 분노’ 작전은 ‘거대한 실패’로 끝날 위험에 처해 있다.”

중요한 물음은 트럼프가 이 실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트럼프는 걸프 연안 우방들의 압박에 밀려 승리를 선언하고 이란 공격을 멈출 수도 있다. 이는 또 다른 ‘타코(TACO, 트럼프는 언제나 먼저 꼬리를 내린다)’ 사례가 될 것이다. 아니면, 굴욕을 감수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촉구를 받아 전쟁을 키울 수도 있다.

지금은 인류에게 특별히 위태로운 시점이다. 2007~2009년 금융 위기 이래 진행된 세계 자본주의의 내파는 이 시스템을 자멸의 길로 더 빠르게 치닫게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

출처 Alex Callinicos, 'Will Trump chicken out of Iran invasion?' (2026. 3. 9.) / 번역 김준호

▶ 2면에서 이어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의 말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갓산은 레바논 정부가 “극도로 친미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일부는 사실상 친이스라엘적입니다. 레바논군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압도 다수의 레바논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스라엘에 맞서 뭐라도 해야 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력이 큼니다.

“정부는 많은 면에서 시아파 저항단체인 헤즈볼라보다 인기가 없을 겁

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및 수니파 공동체들의 지도자들은 친정부적이라 종파 간 견제가 있기도 하죠.

“헤즈볼라는 지난 11년 동안 약화됐습니다. 만인의 증오 대상이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키기 위해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중동에서 지지자를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지지를 잃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헤즈볼라만이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Socialist Worker, 'Israel pounds Lebanon as state cracks down on resistance movement' (2026. 3. 6.) / 번역 김준호

한국 정부의 중동 파병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김영익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자위대 중동 파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이 일본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리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다.

6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미국에 ‘무임승차’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유럽 동맹국들에 전쟁 지원을 촉구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기지 제공과 항공모함 파견 등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요청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전쟁이 장기화되면 트럼프의 ‘지원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고 예상한다(〈조선일보〉 3월 8일 자).

이미 3월 2일 미국 전쟁부 차관 엘 브리지 콜비는 중동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하며 안구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바 있다. 아무 말도 없이 서해 상공에서 중국을 겨냥한 위협천만한 군사 훈련을 벌인 미국이 갑자기 중동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연락하는 것은 바라는 게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트럼프-네타냐후의 전쟁을 지원하게 되면 안 된다. 호르무즈 코앞에 있는 청해부대

서라면 초등학생 수백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런 전쟁과 학살에 협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냉전 종식 이래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거의 빠짐없이 화답해 왔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적극 편승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고,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의 전쟁을 지원했다.

가령 1990~1991년 걸프전 때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의료 지원단과 공병 장비를 파견하고, 전비 5억 달러를 지원했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자 한국은 군대를 파견해 미국의 점령을 지원했다.

특히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공병 부대와 의료 부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데 이어, 반대 여론과 항의를 무릅쓰고 2004년 자이툰 부대까지 파견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의 파병 규모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무슬림 나라가 아닌 한국의 파병 결정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부담도 덜어 줬다. 그 당시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요 책임자들이었던 위성락, 이종석 같은 자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선택을 더욱 예의 주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미 무기 지원 중

이재명 정부는 아직 미국한테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이란을 공격하는 미군 기지가 있는) UAE에 방공 미사일을 보냈고, 이동식 대공포 등 다른 무기도 걸프 연안 국가들에 주려 한다. 한국도 이미 전쟁에 한 발 들여놓은 것이다.

개전을 전후해 미군은 대형 수송기를 대거 동원해 패트리엇 포대 등 주한미군 전력을 대규모로 중동으로 차출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일이다. 미군 전력이 한국에 마음대로 접근하고 주둔할 수 있고 한국에서 언제든지 발진하게 되면서, 그만큼 한국이 국제적 분쟁에 더 많이 연루되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 미국의 전쟁에 동맹 끌어다 쓰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주한미군 차출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비판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을 “현대화”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이재명 정부가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전략적 유연성은 비단 주한미군 차출에만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경렬 전 양골라 대사(필명 이창천)는 2000년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본

격적으로 제기했을 때 그것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만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초에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와 미국이 상정하고 있던 군대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이였다. 미군이 한국군을 데리고 전 세계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얘기다.”(《브라보 한미동맹》)

이경렬 전 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이 2000년대 전반부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우익 럼스펠드의 구상을 상기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한

국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는 등 미국의 요청에 적극 화답했다. “미국은 ... 한국의 군대를 다른 지역의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다.”(같은 책)

이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은 미국의 이란 전쟁과 주한미군 차출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건재를 위해서는 우리도 동맹국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른 일각에서도 전쟁 장기화 시 아덴만의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미군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면, 중동은 물론 전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려 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고, 한반도 등 동아시아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파병은 물론이고 위선적인 ‘비군사적’ 지원으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쟁을 뒷받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이란 정권 지지를 통해 패퇴시킬 수 없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그가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는 끝없는 전쟁일 것이다)의 최신 라운드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며 전쟁을 일으켰고, 트럼프와 협공하는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헤즈볼라 등 적대자들을 분쇄해 지역 판도를 바꾸고자 한다.

그들이 일으킨 전쟁에 중동 11개국 이 휘말렸고, 불안정이 커져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일각에서는 이란 정권의 두 달 전 대학살에 눈감고 이란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편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강국을 지지해 제국주의에 맞선다는 생각이다. 노정협 같은 스탈린주의 종파는 이런 관점을 절대화해, 노동자연대를 “제국주의의 벼”이라며 비판한다.

올해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략했을 때도 노정협은 마두로 정부가 반제국주의 정부라며 무비판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재확인”한 델시 로드리게스가 미국에 석유를 개방하자 노정협은 ‘입꼭담’했다.

한편 그 맞은편에는 억압적 ‘신정 체제’인 이란 정권을 편들 수 없으므로 이란 정권이나 미국·이스라엘이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은 이란인들의 저항을 돕기는커녕 후퇴시킬 것이다. 심지어 반정부 세력의 우익 반동적인 부분, 즉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며 폭격에 환호하는 팔레비 복귀 지지자들을 고무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반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을 포함한 평범한 중동인들이 지금보다 더한 궁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인들이 마주한 적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랬듯 이란인들의 목숨을 완전히 하찮게 여긴다.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은 이를 뚜렷이 보여 줬다.

지역 강국 옹호해 제국주의 맞서는 전략의 문제점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야만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성공하면 팔레스타인인들과 평범한 중동인들이 더 궁지로 몰릴 것이다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난 2년은 이란 같은 지역 강국을 옹호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맞선다는 전략의 약점을 보여 줬다.

이란은 중동에서 “저항의 축”을 이끈다고 자처해 왔다. 헤즈볼라와 이라크 민병대들뿐 아니라 심지어 시리아의 범죄적인 알아사드 독재 정권도 몰락하기 전까지 그 축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란은 가자인들이 인종학살 당할 동안 싸우지 않았다. 지난해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후에야 비로소 이란은 이스라엘을 소극적으로 반격했다.

이는 이란 정권의 우선순위가 중동 지역 강국들 간 경쟁에서 이란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힘을 확대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은 “저항의 축”을 이용하는 한편 제국주의 열강, 러시아·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 이란의 발달한 드론 기술력과 제조 역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도 도움을 줬다.

이란 정권은 이란 국가 강화를 우선해 그 부담을 이란 민중에 떠넘겨 오면서 심지어 근래에는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정당성을 잃었다.

이란 정권의 손에는 특히 올해 1월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 학살당한 수천 명의 피가 묻어 있다.

이 시위는 2009년부터 거듭된 이란 내 저항의 가장 최근 사례였다. 물가 급등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분노가 결

합돼 반정부 시위가 이란에서 주기적으로 벌어져 왔다.

물론 트럼프가 다시 부과한 더 강력한 제재는 이란의 경제를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란 정권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난 수십 년간 맹렬히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실패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란 정권은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맹렬히 추진하고, 일자리를 삭감하고 불안정화했다. 그러나 경제는 외려 ‘역성장’했고, 물가는 폭등했고,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분노한 이란 빈곤 청년들의 항의가 분출하자 정권은 권위주의적 폭력으로 대응했다. 정권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짧은 기간에 급격히 쌓여 왔다.

이 때문에 지금 이란 정권은 제국주의·시온주의 전쟁 기구에 맞선 저항으로 대중을 결집시키기 어렵다. 그럴 의지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대량 학살한 청년 노동계급을 두려워할 테니 말이다.

이란 정권의 군사적 승리에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진정으로 필요한 행위 주체를 불러내기가 어렵다.

진정 필요한 행위 주체를 동원할 전략

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참사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해방을 쟁취하려면 그럴 잠재력과 이해관계가 있는 진정한 세력을 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이란의 석유·가스 노동자들이 그런 구실을 했다. 1978~1979년 이란 혁명에서 그들의 대중 파업은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의 양대 중동 우방이던 팔레비 왕정을 타도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가장 억압적인 정부라도 타도할 수 있는 힘은 외세 개입이 아니라 노동계급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그때보다 중동 자본주의가 훨씬 성장했다. 중동 경제의 핵심인 걸프 연안 지역(이란 포함)에 강력한 힘을 품은 다국적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한다.

그들은 살인적 폭염, 빈번한 산재, 고용 불안정, 빈곤과 빈부격차 등의 고통을 공유한다. 자국 정권 지지로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란 노동자들과 그 노동자들에게는 그 정권들 모두에 맞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훔칠 보여 준 두 사례가 있다.

하나는 2011년 ‘아랍의 봄’ 항쟁이다. 미국의 역내 핵심 우방이던 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를 비롯해 곳곳에서 독재자들이 몰락했다. 중동 질서가 뒤흔들리자 그 질서에 기대 있는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대 안보 위기”(네타냐후 자신이 인정함)에 전율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이탈리아·그리스·모로코 등 지중해 여러 항구에서 손발을 맞춘 총파업과 봉쇄, 거리 행동이다. 이 노동자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기구가 가자지구에서 작동하는 데에 일부 차질을 줬다. 그 선두에 선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중동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그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설 자신감과 정치적 힘을 줬다.

역사적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는 대패하고 황제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됐다. 후임 공화파 정부는 수도 파리를 버리고 도망쳤다.

프로이센과 반동적 정부군에 맞서 파리를 방어한 것은 노동계급 사람들이었다.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파리 민중은 파리 코뮌을 수립해 미래 노동자 권력의 해방적 잠재력을 단기간이나마 보여 줬다.

코뮌은 프로이센과 정부군의 합동 공격에 밀려 안타깝게도 단명했지만, 전쟁과 전쟁을 낳는 국제적 국가체계에 맞설 진정한 행위 주체를 보여 주는 노동계급의 기억으로 남았다.(관련 글 《마르크스21》 38호 ‘최초의 노동자 권력, 파리 코뮌’)

제국주의에 맞서는 사람들의 과제는 중동에서도, 다른 (친)서방 지역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을 단결시켜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 제국주의론의 관점

김인식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은 제국주의적 전쟁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시온주의자들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랬듯이 이란인들의 죽음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트럼프는 이란 민중에게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란 민중은 정부 장악 전에 트럼프의 미사일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다.

왜 이란을 공격하는가?

미국의 이란 전쟁은 제국주의 시스템이 겪는 위기의 징후다. 이 위기는 근본적으로, 세계 최대의 군사력·경제력을 보유한 미국이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는 데서 비롯한다.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고 있고, 그 결과 강대국들 간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미중 간 갈등 격화가 두드러진다.

중동 지역에서도 미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자본과,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자본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한 뒤 중국은 걸프 지역 에너지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걸프 지역 원유의 38퍼센트가 중국으로 향하는 한편, 중국의 원자재·첨단기술·투자가 걸프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제국주의 시스템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그런 경쟁 격화가 상이한 지역에

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고 있다. 자원 강탈,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납치, 함포 외교, 폭격에 의한 이란 정권 교체 시도 등 자유주의자들조차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행태들이 그것이다.

제국주의 시스템의 중심부에서 전개되는 세력 관계의 변화 때문에, 중동은 지역 강국들이 저마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다투는 장이 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전부터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란 등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적 관심이 이란 전쟁에 쏠리는 틈을 타 가자 인종학살과 서안지구 정착지를 늘리고 있다. 또, 레바논을 공격해 3월 8일 현재 400여 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란 전쟁은 가자 인종학살의 연장선이다.

이란도 이런 지역 경쟁에 뛰어들어 왔다. 이란은 특히 2003년 이후 미국이 이라크 저항군에게 당한 패배를 이용

해 지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란은 이라크·시리아 등과 ‘저항의 축’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란 정권이 헤즈볼라와 함께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민중혁명 진압을 지원한 것은 사악한 반혁명적 구실이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을 통해 자국이 수십 년간 겪어 온 패배와 패권 쇠퇴를 되돌리고자 한다.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전투기들이 [이란] 하늘에서 하루 종일 죽음과 파괴를 자행할 것이다. 애초부터 공정한 싸움을 할 의도도 없었고, 지금도 공정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졌을 때 두들겨 패고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는 물론이고 이란조차 대량 살육으로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광기는 소름 끼치지만 그들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다.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잃은 뒤에도 반격을 하고 있다. 국가 구조가 붕괴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19만 병력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휘관 사망으로 지휘 체계에 타격을 입었지만 붕괴하지는 않았다. 이란 정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사일과 제공권의 압도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지만,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무모하다. ‘테러와의 전쟁’ 광풍이 일던 2002년 초에도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려 했다. 당시 이란 인구는 6,600만 명이였다(현재는 9,200만 명이다). 그런 나라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장기간의 점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계획을 포기했다.

심지어 이란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이라크에서도 미국의 점령은 결국 실패했다. 그 여파로 2011~2013년 아랍혁명이 일어났다. 역사에서 전쟁과 국

내 반란은 종종 연결됐다.

지금 미국 제국주의는 2000년대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불안정한데도 트럼프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이란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 이래 폭격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그나마 우호적인 세력이 지상에 존재해 공군의 폭격과 협공하면서 작전을 편다면 모를까, 이란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일단 폭격만으로 이란 정권을 제거할 수 없다. 폭격으로 이란 지도자들이 살해돼도,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면서 기존 정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실제로 강경파로 알려진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권력을 승계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자신이 선택하겠다고 큰소리치던 트럼프에게 한 방 먹인 것이다.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간과한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일종의 외판점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란은 중동 전역에



미국의 폭격으로 죽은 아이들의 장례식에 사진을 들고 참가한 이란인들

뻗어 있는 넝쿨과도 같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글로벌 자본 축적의 새로운 중심지인 걸프 지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걸프 국가들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란 정권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30퍼센트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걸프 지역은 에너지 분야를 넘어 동서양 교역의 대체 불가능한 허브로 변모했다. 그런데 지금 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잇는 이

지역의 핵심 거점 공항들이 마비됐다. 걸프 연안의 왕정들은 단기전은 견딜지 몰라도 장기전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를 두고 살 떨리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트럼프는 상충되는 두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9일 걸프 연안 왕정들의 압박을 수용하는 듯 전쟁의 조기 종결을 시사했다.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전날에는 네타냐후와 “공동으로” 전쟁 종식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엄청난 살상 능력에도 불구하고 폭격만으로 이란 정권을 제거할 수는 없다

한국노동자연대

전술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적 반전 운동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란 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국주의 체제 속에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거대 열강 간의 경쟁만 있는 게 아니다. 이란처럼 지역 강국들도 그 경쟁에 뛰어들다. 이번 전쟁은 거대 열강과 중견 국가 간 전쟁이다. 그런데 그 지역 강국의 정권은 불과 두 달 전에만 해도 자국 민중의 시위를 유혈 진압한 권위주의 정권이다. 실로 이란 정권은 미국 제국주의에 적대적이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투쟁을 지지함에도 자국 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을 대등하게 비난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란 정권의 범죄에 눈감은 채 제국주의로부터 공격받는 그 정권을 편들어야 하는가?

이란 정권

사회주의자들은 이란 정권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억압적일지라도 결코 제국주의를 편들지 않고 제국주의-시온주의의 패배를 바라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이란 대중과 이란 안팎의 소수민족들에게 더한층의 굴종이 강요될 것이며,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의해 팔레스타인, 레바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악행이 저질러질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용단 폭격은 결코 이란 대중의 투쟁을 고취

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지지하도록 만듦으로써 투쟁을 후퇴시킬 것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란 정권은 대중에게 복종을 강요할 더 큰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세의 군사 개입에 의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제국주의의 대리인인 팔레비 지지자들도 결코 변화의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정권 반대파 중에서 가장 반동적인 부분이다.

한편, 이란 정권이 미국의 적은 맞지만 혁명적이거나 진보적인 정권이 아니다. 이란 정권은 1979년 민중 혁명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찾지만, 당시에 노동계급 운동을 극렬 탄압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자국민을 학살하고 탄압해 온 반동적인 정권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권들이 제국주의의 공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정권들은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싸우더라도 비효과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자국의 피지배 대중과도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폭격을 받아 초등학교 160여 명이 숨진 미나브의 합동 장례식에서 가난한 농민들은 이렇게 외쳤다.“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항복은 없다.” 그러나 이란 정권은 미국·이스라엘에 항전하기 위해 (베트남에서처럼) 대중을 동원하는 ‘인민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란 권력자들은 이미 확보한 국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에 거대한 반정부 항쟁을 벌인 대중을 동원하는 것은 자신

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은 정규군 중심의 국가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란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브릭스도 전혀 효과적인 반제국주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메네이가 살해되고 많은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브릭스는 전혀 집단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개별 국가의 성명만 있을 뿐이다.

브릭스

중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으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전쟁을 유럽 국가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이 전진할 호재로 본다.

‘미국의 침략에 대한 역지력’이라는 다극화 세계는 딱 이 정도 수준이다.

이란 전쟁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위기 대응책에는 혼돈과 죽음이 내장돼 있다. 전쟁과 폭력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본질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양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그 어떤 행보보다 거대한 전쟁의 불씨를 댕겼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쟁이 지리적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견잡을 수 없는 지역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트럼프는 동맹국들에 협력 요청을 할 것이다. 영국·프

랑스·독일은 직접 참전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협력해 이란의 반격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은 이미 대규모로 차출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동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트럼프는 심중팔구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벌써부터 트럼프의 ‘지원 청구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면서 무기 지원 등을 하되 파병까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기 지원도 미국의 대량 학살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레바논·팔레스타인에서 벌이는 학살에서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은 얻을 것이 (고통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쟁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지옥문을 열었지만, 국제적 반전 운동도 시작됐다. 미국·영국 등 서방 나라들뿐 아니라 레바논·이라크·예멘·파키스탄 등 중동과 아시아에서도 반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동의 반전 운동이 중요하다. 걸프 연안의 정권들은 자국(정확히 말하면, 국내 미국 대사관과 기지들)이 이란에 의해 공격받는데도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협력했다가는 노동자와 빈민들의 반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 같은 친서방 나라들에서의 반전 운동은 구미와 중동 지역에서 대중이 투쟁에 나서도록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에 무기 공급 중단하라

한국산 무기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에 이용되고 있다. UAE 정부는 한국 정부에 천궁-2 유도탄 추가 납품을 긴급 요청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천궁-2 유도탄 30여 기를 신속하게 UAE에 보냈다. UAE군 C-17 수송기가 대구공항에 와서 실어 갔다.

언론들은 천궁-2의 실전 성능이 입증됐다고 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가 'K-방산'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런 잔인한 기대를 반영하듯 천궁-2 개발사 LIG넥스원의 주가가 치솟았다. 주요 군수 기업의 하나인 한화는 LG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한국 대기업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

전쟁 특수

이재명 정부도 천궁-2의 '활약'을 무기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은 "방공 무기와 관련한 협조는 여러 나라에서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9일에는 중동 국가들이 무인기 대응 무기인 '비호복합'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동 국가들이 '가성비' 좋은 한국산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려 한다.

한국 군수 업계에서는 중동 전쟁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유럽 진출에 더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프랑스 등의 군수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한국도 '죽음의 상인' 대열에 올라 있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한국 군수 기업들은 전쟁 특수를 누렸다. 지난해 12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 4대 군수 기업의 매출이 31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 최대 무기 기업인 한화는 2024년 무기 매출이 42퍼센트 증가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무기 수출이라고 밝혔다.

한국 군수 산업은 윤석열 정권 시기

에 한차례 도약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운운하며 무기 수출과 '방산 세일즈 외교'에 열심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한국을 '4대 방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을 방산 특사로 임명해 나토 회원국과 중동 국가 등에 무기를 수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타국과의 정상회담 때마다 방산 협력을 합의하고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에도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란 전쟁을 'K-방산'의 성장 기회로 삼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전쟁이 이익('국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다. 미국·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3월 8일 현재까지 1,300명 넘는 이란인이 사망했다. 그중에는 학교 폭격으로 사망한 초등학교생 180여 명도 있다.

한국산 무기 수출로 버는 돈에는 이란인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한마디 없고 오히려 무기 수출을 확대하며 전쟁 장기화와 확전 위험에 일조하고 있다.

방어용 무기?

일각에서는 "전쟁에 한국산 무기를 파는 것이 씁쓸하지만 천궁-2가 방어용 무기라는 점이 조금은 위안이 된다"는 반응도 있다. <<서울신문>>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방어용 무기 공급까지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무기는 공격용이나 방어용이나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구실은 방어와 요격인 무기도, 전투와 전쟁 전반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의 일부다. 예컨대 공군기지와 그 주변에 배치된 '방공' 무기들은 적국 공격을 위한 폭격기, 탄약고, 활주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배자들이 전쟁 노력을 정당화하



천궁-2는 이란의 반격을 좌절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

기 위해 동원하는 '방어용,' '비살상용 무기' 같은 이데올로기적 용어에 속아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전쟁에서 누구를 상대로 무기를 쓰느냐다.

천궁-2는 미국·이스라엘의 동맹이자 독재 국가인 UAE가 자국 내 미군 기지를 방어하며 이란의 반격을 좌절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

즉, 천궁-2 지원은 미국·이스라엘의 전쟁 노력을 돕는 것으로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 돕는 'K-방산'

천궁-2 공급은 단지 군수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에 적극 협력하고, 그것을 한국 군사력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면서 핵잠수함 도입 승인을 받아냈고,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력하며 대

대적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직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다. <<관련 기사: 본지 574호,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말라'>>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일들을 '국익'으로 정당화한다.

천궁-2 추가 공급에 관해서도 그렇다. 강훈식은 UAE산 원유 긴급 도입을 발표하며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가 폭등과 에너지 위기를 걱정한다면 무기를 공급할 게 아니라 전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전쟁 장기화가 촉발할 유가 등 물가 상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계급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 공급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중동 민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불난 집에 기름과 장작을 넣고 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성공을 거둘수록 더욱 과감하게 제국주의적 공세에 나설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것에 공모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이재혁

임금 인상 요구하며 투쟁하려는 삼성전자 노동자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기본급 7퍼센트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는 3월 9~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4월 23일 집중 집회를 거쳐 5월 21일~6월 7일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성과급을 연봉의 50퍼센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연봉 인상은 크게 제약되고 있다. 2023년 '경영 위기' 때는 성과급 삭감으로 연봉이 30퍼센트나 줄었는데, 호황 때는 성과 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영업

이익의 10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올해 두 회사의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이 받는 성과급은 세 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염원이 일었고, 지난 수개월간 노조 가입이 폭증했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었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현재 6만 6,800명에 달한다. 전체 삼성전자 노동자의 절반이 넘었다.

여기에 전삼노 소속 조합원을 합치면 노조 조합원이 9만 명에 달한다. 2년 전 전삼노가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파업을 벌였을 때 3만여 명 규모였던 것에서 전체 조합원 수가 3곱절이 된 것이다.

조합원들의 열기는 파업 찬반투표 참가율로도 드러나고 있다. 투표 종료 시한이 많이 남았음에도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은 단 하루 만에 50퍼센트를

육박했다.

사용자 측은 투쟁을 약화시키려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면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질 것이라며 말이다.

그러나 성과급 상한제를 유지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용자 측이다.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이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해 임금을 대폭 올리면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상향평준화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사용자 측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 대신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특별포상을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동료 간의 경쟁,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 협업 문화를 망치는 것이다(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

친사용자 언론들은 벌써부터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국가 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노조의 파업 불참자 불이익 지침이 개인의 자유를 해친다는 비난도 덧붙인다. 그러나 사측에 굴복해 혼자 살겠다고 민주적으로 이뤄진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개인 자유가 아니라 파업과 노동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성과를 거두면,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극할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사용자들의 비난에 맞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정선영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투쟁 노동강도 강화하는 '하루 2회전 배송' 계획 반대한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측의 '2회전 배송'(하루에 두 번 배송) 도입 시도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

그간 오전에 분류하고 오후에 배송하는 '1회전 배송'이 일반적이었는데(명절 등 제외), '2회전 배송'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의 속도 경쟁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몰아가는 주범으로 지목돼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지난달 쿠팡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쿠팡 노동자 7명이 물류센터, 택배 현장에서 사망했다. 쿠팡의 노동자 쥐어짜기가 낳은 참사였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2021년에 두 차례 있었고, 현재 3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윤 경쟁에 눈먼 택배사 사용자들은 속도 경쟁을 늦추려 하지 않는다.



택배 분류 작업장에서 투쟁 동참을 호소하는 조합원들

쿠팡만 문제가 아니다.

CJ대한통운도 이미 이런 추세를 강화해 왔다. 쿠팡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주 7일 배송('매일매일 오네 O-NE')을 시작했다. 이어서 3월 31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대전, 곤지암 두 핵심 허브 터미널(전국의 택배 물품이 한데 모이는 핵심 거점)에서 '하루 2회전 배송'을 시범 운영하려고 한다.

CJ대한통운 사용자 측은 시범 운영 일 뿐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쿠팡

과 같은 다회전 배송(쿠팡의 경우, 주간 2회전/야간 3회전)을 본격 도입하려는 수순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화요일에 국한된 2회전 배송이라 하지만, 매일 이루어질 거란 예상은 자명하다."(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CJ남부지회 홍보물)

CJ대한통운 사측은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비난을 받는 사이 쿠팡에게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 한다.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제

재하기보다는 쿠팡과 경쟁하는 국내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 주려고 하면서, 택배 산업 사용자들의 속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속도 경쟁

CJ대한통운은 이마트 택배 물량을 전담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허용될 것에 대비해 배송 다변화와 속도를 높이려는 유인이 커졌다. 그러나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될 것이다.

전국택배노조 김기홍 울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2회전 배송 물량은) 울산에 오후 5시경에 도착하고, 그 물건 받아서 배송을 다시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측은 2회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또 배송 나가면 야간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가중과 야간 노동은 과로사와

▶ 10면으로 이어짐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이주민 정주 증가에 대응해 통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3월 3일 법무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하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을 완화하겠다고 등 애드벌룬을 띄웠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아팩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했고, 베트남인 여성 이주노동자 두안 씨가 단속을 피하다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인종차별적 정서에 편승하면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축소를 지시했다. 배달업에서 일하는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를 상대로 첫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실효성이 있는 이주민 처우 개선 방안은 이번 미래전략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래전략의 핵심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통제라 할 수 있다. 즉, 역대 정부들이 이어온 이민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2027’을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이른바 ‘단순 노무’ 업종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에서 저렴하게 공급받되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한사코 막는 것이었다. 노동력 재생산에 드는 비용은 때 먹고,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대의 노동력을 외국에서 데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는 이주민 일반의 고통을 키울 것이다

려와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다. 전체 이주민뿐 아니라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도 늘어났다. 가족 단위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늘었다.

이주민 자신의 바람뿐 아니라 한국에 와 일하면서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이 확대되면서 훨씬 다양한 부문에 이주민이 유입됐다.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단기 순환시키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숙련의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됐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현실을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미래전략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을 선별해 받으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내 대학을 통해 학력·기량이 검증된 외국인 우선 활용”하고 “지역 정주형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겠다

고 한다. 한국의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방 기업 취직 시 발급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신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학위과정 운영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래야 정부와 사용자들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 즉 노동력 훈련이나 교육, 복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정주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넓어지는 것이 어떤 이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주할 기회에 조건을 붙임으로써, 정부는 이주민 유입을 사용자들의 필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도 강화하려 한다. 이주민 유입이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양질의 인구확보’에 해롭다는 근본적으로 인종차별적인 편견이 여전한 것이다.

예컨대 미래전략은 ‘육성형 전문 기술인력 비자’ 신설과 함께 유학생의 학업·취업 성과 등에 따라 대학을 평가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더욱 통제하도록 만들 것이다.

지금도 일부 유학생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자 정부는 소속 유학생의 미등록 체류율 등을 평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이 나서서 미등록 체류자 단속반 구실을 하게 만들었다. 2023년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킨 경악스러운 사건이 이런 맥락에서 벌어졌다.

또한, 미래전략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단속 예고, 외국인 커뮤니티 활용 정보수집을 통한 동향 파악, 차량 순찰 강화” 등.

실제로 정부는 미래전략 발표 일주일 만에 배달업 분야(라이더) “불법취업” 이주민을 두 달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업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적대적 경쟁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큰 업종인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또, 그런 단속 강화는 두안 씨의 사례처럼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수 있고, 이주민 배척하라는 우파적 요구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전략에서 “반(反)이민정서·갈등 중재 및 외국인 권익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문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주민의 유입과 정주를 환영하면서,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임준형

▶ 9면에서 이어짐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건강권과 휴식권도 문제지만,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해지면 택배 노동자들이 심리적으로 더 서두르게 되거든요.”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월 3일부터 단협에 명시된 출차 시간

(12시 정시 출차)를 지키는 일종의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최남선 CJ남부지회장은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2회전 관련된 언론 보도가 2월 초에 나왔는데, 이후 한 달 만에 약 2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어요. 현장 노동

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죠.”

또,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CJ남부지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 대리점에서는 조합원들이 선전전과 집회 등으로 항의의 행동을 하고 있다. 택배 분류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 레일 앞에서 ‘함께 투쟁합시다!’ 하고 찌렁찌렁하게 선동하는 모습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높은 불만과 투지가 느껴졌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번 주중에 CJ대한통운의 ‘하루 2회전 배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안우춘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단속 중단하라

법무부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배달업 분야 미등록 취업 이주민(이하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거주(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장기 체류 비자가 있는 일부 이주민만 '라이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자에 따른 취업 제한 때문에 유학생(D2, D4) 등은 엄연히 비자를 가졌음에도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배달업은 언어 진입 장벽이 낮고, 직장 내 인종차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많은 이주민이 선택하는 직업이다. 문제는 라이더 취업이 가장 절실한 이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취업 제한 제도이지,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가 아니다.

한편, 정부의 집중 단속은 정부가 외면해 온 한국인 라이더 생계난의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인과 이주민 라이더 모두의 노동에 전적으로 기대면서도 그들의 생계는 나 몰라라 했다.

라이더들이 배달 1건마다 받는 돈은 10년 넘도록 동결되거나 배달 제도 개편 등으로 삭감됐다. 그 덕분에 플랫폼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라이더유니온과 배달플랫폼 노조는 저임금과 알고리즘, AI를 이용한 통제 강화에 맞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그런 정부가 "국민 일자리를 보호"한다며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실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노동자 대 사용자·정부의 갈등(계급 갈등)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이주민 대 한국인의 갈등(민족주의적 구도)으로 바꿔치기하려는 것이다.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중에는 가난한 유학생들이 많다 한국인 라이더들은 이들과 단결하는 데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비자에 따른 라이더 취업 제한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조장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중 단속을 '마침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반겨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우르스럽게도 일부 한국인 라이더들은 거리에서 이주민 라이더를 다짜고짜 붙잡고 비자 확인을 요구하는 일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사적 개인들의 비자 확인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이유도 없고 그것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그 한국인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이주민을 가로막고 욕설까지 퍼붓는다. 명백한 폭력이자 인종차별이다.

명백한 인종차별

정부의 집중 단속은 일부 한국인 라이더들의 인종차별적 폭력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러면 더 노골적으로 이주민 배척을 선동하는 극우가 이를 파고들 수 있다.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가 더 위험하게 운전한다거나 무보험·무면허라서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더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비방이다. 면허 문제는 본인 명의로 운전 면허를 따거나 보험을 들 수 없게 제약하는 제도가 문제이지 라이더를 탓이 아니다.

배민과 쿠팡의 하청업체(배민 플러스, 쿠팡이츠 플러스) 등 배달대행 업체들은 한국인 명의로 된 가짜 라이더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줬다가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에게 대여해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 대가로 한 달에 약 30만 원 또는 건당 얼마씩 떼어 간다고 한다.

이러한 명의 세탁 과정에서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는 임금이 깎일 뿐 아니라 보험도, 면허도 없는 라이더가 되는 것이다.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야말로 자기 명의로 라이더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가장 크다.

정부의 배달업 취업 비자 제한은 한국인 라이더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미등록 이주민 라이더를 저임금에 묶어 두고, 내외국인 라이더들을 모두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 라이더들은 오히려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들과 단결해야 유리하다. 집중 단속에 반대하고 비자에 따른 라이더 취업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중에는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 많다. 유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고 (많은 경우 한국인 학생보다 훨씬 비싸다), 한국에 각종 세금을 내고,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우익

의 무임승차론은 어불성설 헛소리다.

유학생들의 라이더 취업을 색출하겠다고 설치는 한국인 개인들은 사용자를 향해야 할 분노를 더 약한 자에게 해소하는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인 라이더들이 '자체 단속'에 열을 올릴수록 같은 노동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그러면 배달대행업체들은 한국인 라이더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때 대체 인력 모집에 인종 간 갈등을 이용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분열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

김종환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내란 청산'과 민생, 또 말로만?
- ★ 속속 출마 선언한 극우들. 이들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
- ★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 트럼프의 악명 높은 이민자 단속 작전의 설계자, 해임되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맞선 글로벌 행동 3.29 전국 집중 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맞서는 글로벌 행동이 벌어진다. 3월 28~29일 미국, 영국, 그리스 등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와 그가 고무하는 극우, 그가 벌이는 전쟁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한국에서는 3월 29일 '팔레스타인 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전국 집중 행동의 날을 주최한다.

팔연사의 전국 집중 행동은 3월 30일 팔레스타인 '땅의 날' 50주년을 기리는 행동이기도 하다. 땅의 날은 이스라엘의 토지 강탈, 정착촌 확대에 맞서 1976년 벌어진 팔레스타인인들의 총파업과 대중 저항을 기리는 날이다.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점령의 현실에 놓여 있다. 트럼프는 가자 '평화 이사회'라는 기구를 통해 가자지구를 식민 지배하려 한다. 이스라엘은 불법 정착촌 건설 속도전을 벌이며 서안지구를 병합하려 한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바로 이 강탈 행위의 최대 범죄자다.

미나브 초등학교 학살

이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서 180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들이 사망한 사건은 전 세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까지 이란인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레바논까지 확대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인 300명이 사망했다.

이란 학교와 병원 등 민간 시설 폭격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인 전쟁 범죄와 너무도 닮아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을 거스르는 이란을 약화시키고 이 기회에 팔레스타인 점령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 강탈자들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동 지역에서 이들의 만행은 더 심해질 것이다. 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학교와 병원 폭격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 범죄의 연장이다

레스타인 연대와 이란 전쟁 반대는 분리되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의 판을 키우며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이 전쟁의 불길이 걸프 연안 친미 왕정 국가들로 번질 것은 익히 경고됐지만 트럼프는 무시했다. 오히려 그는 지원을 머뭇거리는 영국을 타박하는 등 친미 국가들의 동참과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대응에 나서고 있고, 한국도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란의 주요 타깃이 된 아랍에미리트에는 한국군 아크부대가 파병돼 있고, 국방부는 미국의 요청이 있을 시 아덴만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맞서는 3월 29일 전국 집중 행동의 날에 힘을 모으자.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굳건히 저항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극우를 고무하고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강탈자들에게 맞서 행진하자.

박이량

땅의 날 50주년 전국 집중 행동의 날

팔레스타인 땅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것!

강탈자 트럼프·네타냐후에 맞서자!

🕒 3월 29일(일) 오후 2시

📍 서울 열린송헌녹지광장 입구
(안국역 1번 출구)

- 아랍어, 영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 앞 행진